

9. 대구광역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 1. 심사경과

- 발의일자 : 2019년 10월 2일
- 발 의 자 : 이영애 의원, 김대현 의원, 김동식 의원, 김성태 의원,  
김원규 의원, 김재우 의원, 김지만 의원, 김혜정 의원,  
윤영애 의원, 이태손 의원, 이진련 의원, 정천락 의원,  
홍인표 의원, 황순자 의원
- 회부일자 : 2019년 10월 8일
- 상정일자 : 제270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2019년 10월 16일) 원안 가결

##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 이영애 의원)

### □ 제안이유

- 본 조례안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의 제정('18.12.24.)에 따라 지역 사회 여성폭력 예방과 여성의 안전을 위한 지역안전망 구축하고,
-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 주요내용

-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2조에 따른 용어를 정의(안 제2조)
-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안 제3조)
- 여성폭력방지정책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안 제4조)
-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5조)
- 여성폭력방지정책 관련 정보 제공 의무를 규정(안 제6조)
- 여성폭력피해자 등의 정보보호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안 제7조)
- 여성폭력 실태조사 의무를 규정(안 제8조)
- 대구광역시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안 제9조)
-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기능을 규정(안 제10조)
-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구성과 회의, 의견청취 등을 규정(안 제11조~안 제16조)

## 3. 검토보고 요지(보고자 : 전문위원 김창업)

### □ 주요 검토사항

-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본 조례의 제정 목적을 규정하고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에 따르도록 하였고,

◆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정의)

1. "여성폭력"이란 성별에 기반한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신체적·정신적 안녕과 안전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지속적 괴롭힘 행위와 그 밖에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등을 말한다.
2. "여성폭력 피해자"란 여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 **안 제3조**에서는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등을 위하여 시책 수립 등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음.
- **안 제4조**는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정책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고
- **안 제5조**에서는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서는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정책 자료를 관련 시설에 제공하되, 피해자 등의 정보보호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 **안 제8조**에서는 3년마다 여성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였음.
- **안 제9조**와 **안 제10조**에서는 여성폭력방지정책 심의를 위한 대구광역시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하였음.
- **안 제11조**부터 **안 제16조**에서는 위원회의 위원구성, 회의, 의견청취, 위원수당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 **안 제17조**는 여성폭력방지정책 관련 업무 종사자에 대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 준수의 의무를 규정하였으며,

- 부칙에서는 기존의 「대구광역시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도록 하였음.

## □ 검토결과

- 본 조례안은 2018. 12. 24. 제정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시행 2019. 12. 25.)에 근거하여 지역여성의 폭력피해 예방과 사회안전망 구축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 지금까지 여성폭력(가정폭력)의 경우 국가나 자치단체가 사적 영역의 문제로 보아 가급적 개입하지 않았으나, 법에서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대한 국가와 자치단체의 책임을 명백히 규정함에 따라 관련 정책 추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이 되겠음.
- 최근에 여성에 대한 성폭력·가정폭력·묻지마 폭행 등 폭력 발생 유형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고, 특히 데이트 폭행,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성범죄 등 성폭력 범죄가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여성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조례제정은 필요하다고 하겠음.
- 대구시에서는 현재 해바라기 센터 등 여성폭력 피해자 원스톱지원 센터와 상담소, 보호시설 등을 운영하고 있고, 여성폭력 피해자 자활 및 치료회복 프로그램 등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여성폭력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에도,

- 전국적으로는 여성폭력 발생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지역내 여성폭력에 대한 철저한 실태조사를 통해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게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겠음.

※ 여성폭력 발생건수 : '16년 82,399건, '17년 83,233건, '18년 89,471건

- 본 조례 제정에 따라 구성되는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위원의 경우 여성폭력방지 정책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심의를 위하여 실무경험이 많은 전문가 위주로 구성하고,
-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여성폭력피해자 지원 매뉴얼 및 안내 자료를 관련기관과 공유하는 한편, 피해자에 대한 철저한 개인정보 보호대책 수립을 통하여 개인정보가 누설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겠음.

####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여성에 대한 사이버폭력과 남성폭력에 대한 정책적 관심도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	관심을 가지고 정책추진을 하도록 하겠음.
위원회 구성시 전문가 위주로 구성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전문가 위주로 구성될 수 있도록 하겠음.
여성폭력 피해자 개인정보 누출방지 노력 당부	피해자 관련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할 수 있도록 하겠음.

## 5. 토론요지

- 없음.

## 6. 수정안 요지

- 없음.

##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재석의원 전원찬성)

##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